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the Expected Demand for Elderly Care by Government
in Aged Kore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수 서지원**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Professor: Seo, Jiwo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licy demand for elderly care in aged Korea. The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ged over 45 were used ($n=10,165$).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ed on the expected demand for elderly care by government, controlling the expectations of future life and society. Second, the effects of determinants on the expected demand for elderly care by government varied by the level of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ADL and IADL, familial support by children, public transfers, and ag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welfare mix of elderly care were provided.

Key Words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elderly care by government),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서지원 (jiwonseo@knou.ac.kr)

I. 서론

지난 2000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2018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aged society)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능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85년 6.5%에서 2007년 13.8%로 증가하였고, 유년인구(0-14세)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지수 역시 같은 기간 14.2%에서 55.1%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7). 이와 같이 세계에서 최단기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길어진 노후는 보다 더 오랜 기간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숙원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후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과 개별가족 수준의 준비를 넘어 시의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약화, 재정 부담,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년기의 고용, 여가, 건강 등 생활부문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노후보장과 관련된 논의에는 소득이나 주거, 건강 보장 이외에도 여가, 정서안정,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후보장과 관련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나 소득 급여의 시행은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우리사회 의 경우 아직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개인과 개별가족에 맡겨져 있었던 노후에 대한 책임을 공적부문이 분담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노후부양의 중요한 주체로

서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뒷받침하는 효의 가치가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변화에 의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여 왔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개별가족에 의해 돌봄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여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부양이 가족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부양구조 하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결국 돌봄의 부재를 초래하며 우리사회의 노인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사회 뿐 아니라 최근 서구 복지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가족의 위기이나, 가족 내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온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사회는 아동 뿐 아니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 특히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처우 및 경력 보장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그간 개인과 가족을 비롯한 사적부문에 노후의 삶을 맡겨 온 우리사회는 수명연장과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돌봄의 위기를 보완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획기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사적부문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스스로의 신체적·인지적 및 경제적 역량은 물론 가족, 친지, 이웃 등 다양한 사회적 연계망이 노후생활의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노후생활에 대한 공적부문의 보장 여건이 선진적인 다른 복지국가의 경험을 참조하여 적절한 복지 혼합(welfare mix)의 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향후 장기적 전망을 가

지고 연금제도, 장기요양시설 등 기본적인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여건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06).

이처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후보장에 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기초한 노인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정책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결과, 노년기의 생활비 제공주체를 국가로 인식하는 노인은 1994년 20.5%에서 2004년 4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07)의 조사결과에서도 부양의 책임을 노인자신과 자녀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06년 63.4%로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책임으로 응답한 비율은 18.2%에서 26.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의 확대는 노인의 삶의 질 증진 뿐 아니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통해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돌봄노동을 주로 수행해 온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위축에 대한 손실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사회서비스는 이처럼 가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기대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자리의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노인돌봄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중년기 이후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고령화 정책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관련 정책의 현실

적인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실증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복지의 개념과 주체

1) 노년기 복지의 개념

국가에 의한 노인부양의 의무는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에서 모두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사회국가원리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 즉,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게 일정한 물질적 급부와 적절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는 노령으로 인해 신체적·사회적·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에서 생활여건의 조성 의무, 보호수단의 마련, 실질적 평등의 실현, 사회적 자유의 보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노인이 생활할 만한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 사회시설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적·사회적 활동에 지장이 있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한 보호수단을 사전적·사후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능력의 미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우대와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기회 부여,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국가원리는 개인의 생활을 가급적 개인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

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는데,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복지국가는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회적 곤궁과 생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개인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홍일선, 2008). 우리사회는 ‘사회복지국가’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사회의 헌법에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제34조 제2항)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이념 하의 노년기의 복지는 국가의 노후보장(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적 수행과정과 관련하여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의 개념을 노인의 객관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주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으로 정의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년기의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빈곤 및 신체적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수준의 저하, 사회·심리적인 고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와 같은 노년기 복지의 개념에 따르면 노년기 복지의 대상은 단순히 신체적·인지적 기능 장애가 손상이 있는 노인만을 포함하지 않으며,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요구를 가진 노인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권에 대한 헌법의 이념은 향후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이나 건강에 관한 과제 뿐 아니라 여가나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으로 확대를 지향하며, 정책의 대상을 일부 빈곤계층 등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 노년기 복지의 주체

한 사회의 돌봄 양상을 국가, 시장, 가족, 민간비영리기관 등 네 부문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 Pijl(1994)은 이들 네 부문을 꼭짓점으로 하는 ‘복지다이아몬드’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노년기 복지의 주요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의 전개에 기여하였다 하겠다. 즉, 국가는 돌봄의 수행을 위해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때 현금지급의 대표적인 수단은 수당, 세액공제, 크레딧 시스템(credit system) 등이 있고, 서비스는 장단기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시장은 구매력을 갖춘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정부는 질적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가족은 비공식적으로 중요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주로 이웃이나 친지, 동료 등 비공식적 사회적 연계망을 가지며, 정부는 다양한 사회보장의 형태로 이와 같은 사적부문의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입 수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기관은 주로 자원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식성,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 전문성 등의 수준에 따라 준공공비영리기관, 자조집단, 자원기관 등 다양한 차원의 조직이 포함되는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노인돌봄이 가족원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고, 전통적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족은 중요한 책임의 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돌봄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이타적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적 속성이 강조되어 여성의 보다 적합한 돌봄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주로 최근 고령화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원에 의한 노인부양 관련 쟁점을 다루는 연구(김수영·손태홍, 2007; 박재간, 1999; 송다영, 2005;

윤현숙·차홍봉·조양순, 2000; 이윤로, 2004; 이은희, 2008; 이준상·박애선, 2008; 이현지, 2007)에서는 주로 개별가족에게 스트레스, 불안, 우울, 생활의 제약 등 다양한 부양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부양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에 의해 주로 수행되는 돌봄노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김미경, 2000; 김수정, 2004; 박영란, 2007; 박영란·강순화, 2008; 허라금, 2006; 황정미, 2007)는 사회부문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국 여성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여성의 사회적 기본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봄과 보살핌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 확대를 주장하였다. 한편, 가족, 친지, 이웃 등 비공식적 연계망과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모임 참여를 통한 노인돌봄에 관한 연구(김윤정·최혜경, 2000; 박정윤 외, 2007; 윤순덕·채혜선, 2008)는 사회적 관계와 노년기 삶의 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에 관한 연구(김윤정, 2006; 김찬우, 2008; 김혜경, 2004; 이미애, 2008; 최희경, 2008)도 활발해져 가족 및 비공식적인 돌봄주체와 공식적인 노인돌봄 주체가 적절하게 돌봄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논의의 배경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복지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곽효문, 2005; 김미혜·이석미, 2007; 김철주·홍성대, 2007; 이준영, 2007)도 막대한 장기요양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리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노인돌봄을 통한 노후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다양한 돌봄주체의 혼합(care mix)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

히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노후보장에 관한 책임에 대한 정책과제는 현재 10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소득보장 서비스와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보훈급여,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고용보장 서비스와 급여(취업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일자리박람회,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 주거보장 서비스와 급여(영구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 등), 건강보장 서비스와 급여(건강교육·건강상담·건강교실, 노인건강진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독거노인 주치의 맷기 운동, 방문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푸드마켓, 재활치료,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 급여, 가족요양비,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노 케어 등), 평생교육 서비스와 급여(노인교실·노인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취미·여가 서비스와 급여(경로당, 취미여가프로그램 등), 사회통합·참여 서비스와 급여(자원봉사센터,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전문노인자원봉사활동, 퇴직노인 자원봉사단, 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기관 교통편의서비스, 경로우대제, 노인의날, 경로의 날), 정서안정 서비스와 급여(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 정신보건센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죽음준비교육, 전문가족상담), 권리보호 서비스와 급여(노인보호전문기관, 실종노인찾기, 배회가능노인 인식표 배부 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의 노후보장 서비스와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9). 특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후기고령인구의 장기요양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으로 이어져 2008년 8월 아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을 통해 마련된 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돌봄주체의 책임과 역할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 정립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노후보장에 대한 다양한 책임주체가 분담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의 도래를 앞둔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노년기 복지 수요의 결정요인

1) 인적자본과 노년기 복지수요

인적자본은 Becker(1964)의 연구에 의해 개인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개념으로 제시된 이래, 대표적인 투자 형태로 교육수준, 건강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여 인성, 능력, 기술, 습성 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Rice & Tucker, 1986), 미래의 사회경제적 생산성을 결정한다(Morgan & Duncan, 1982). 특히, 노년기의 건강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수준이나 우울증으로 측정되는 정서적 건강 수준 뿐 아니라 노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도구적 일상생활의 수행을 설명하는 ADL과 IADL 지수로서 신체기능을 포함하는데, 이는 노년기의 특징적인 인적자본으로 기능하며 자기 및 타인에 의한 부양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년기의 기억이나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기능의 수준은 노령으로 인한 치매 취약성과 관련되며 부양과 관련된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김윤정 · 최혜경, 2000).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인지력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및 계산, 소지품의 용도 설명하기, 따라서 말하기, 명령

수행 등 차원으로 구성되며 노인성 치매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수준은 자기부양(self-care)의 가능성과 수준을 결정하여(윤순덕, 2006) 돌봄요구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돌봄주체의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노인의 자기부양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 스스로 독립적인 신체적 · 정서적 기능 및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연속체로 보고, 최근 서구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돌봄으로 강조되는 자기부양의 의의에 주목하였다. 또한 우울은 최근 들어 노년기 복지의 중요한 주제영역이 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어 특히 노인자살 등과 관련된 병리적 행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2002; 엄태완, 2007; 최연희 · 김수현, 2008).

2) 사회자본과 노년기 복지수요

사회자본이론은 한 사회구조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환에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함을 규명하여 사회적 관계에 자본의 속성이 내재함을 설명한다. Bourdieu (1986)는 사회자본을 상호인정과 상호인식을 기반으로 제도화된 지속적 연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자본의 총량을 한 사람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연계망의 범위와 그 연계망에 연결된 사람들의 경제적 · 문화적 · 상징적 자본의 총량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Coleman(2000)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생산을 위해 투자되는 물적자본, 혹은 가시적이지는 않으나 지식, 기술 등 인간에 내재되어 생산성에 기여하는 인적자본과의 차이점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구조의 특성에 따라 형

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신뢰와 규범을 공유하는 가족관계나 지역사회에서 축적되는 사회자본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한 연대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Putnam(1995)은 공동체적 특성을 사회자본의 개념에 포함하여 발전시켰으며, 사회자본이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에 기여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속성을 지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이 사회적 지지, 신뢰, 상호이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상호작용에 기초한 자발적인 결사체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사회규범과 연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공식적·공식적 연계망은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한다(이영현·나영선·김안국·유한구·김미란·이재혁, 2006). 개인은 이러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획득한 경험을 자신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나영선·이재열·한준상·이경욱·한성안, 2005). 사회자본은 연계망의 친밀도, 동질성, 접촉빈도, 균접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속적 특성과 더불어 광범위한 정체성과 상호호혜성을 통해 불완전정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량적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 2007)는 사회자본의 영역을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다시 거시적

수준, 중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각 하위영역에는 개인·친구·이웃, 학교·지역사회, 국가·국제사회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보고서(이영현 외, 2006)는 사회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지역 및 시민참여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사회참여의 수준을 분류한 유석춘(2004)은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협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시민단체·정당·사회단체 참여 등으로 공식적 연계망으로 한정하여 분류하였다. 이때, 모임의 결사방식에 따라 자원적 결사와 연고에 의한 연계망으로 구분하고, 다시 자원적 결사에 의한 연계망을 동호회 유형과 시민단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원적 결사에 의한 연결망 내에서는 가입과 탈퇴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회원 간에는 특정 이념이나 관심 또는 이해관계가 공유되는데, 이러한 연결망 내 목표의 수준에 따라 참여를 주로 사적인 관심에 의해 결정하는 동호회 유형과 공적 관심에 치우쳐 결정하는 시민단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연고에 의한 연계망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기 보다 생애 과정을 통해 획득한 협연, 지연, 학연 등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사례로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나 사회적 참여의 수준은 개인이 속한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른 역할, 가치관, 목표 등에 영향을 받아 축적된다. 특히 중년기 이후에는 그간 축적되어 온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활성화된 친목 모임이나 동창회, 종친회, 종교모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참여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년후기 연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현 외, 2006). 특히, 노년기의 비공식적 연계망과 공식적 연계망은 노후의 경제적·정서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지지하는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노후의 돌봄 주체에 대한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배우자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이외에도 가까운 친구나 이웃은 비공식적 돌봄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노인수발 주체의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의 63.1%가 수발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거하는 가구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체적 돌봄과 관련된 수발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함께하거나 혼자 힘으로 그러한 돌봄을 담당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각각 6.3%, 4.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사회적 연계망 가운데 자녀의 지원이 친척이나 이웃보다 더 빈번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돌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이웃관계가 중시되며 현실적으로 자녀의 일상적 지원이 어렵고 국가에 의한 공식적 돌봄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웃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순영·채혜선, 2008).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재일(200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하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 제약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비공식적 돌봄주체인 친구가 중요한 부양주체가 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제1차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 국사회의 고령화 과정을 파악하여 관련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전국(제주도 제외)에 걸쳐 만 45세 이상 인구 10,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가족,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만족도 등 6개 설문영역에 걸쳐서 종속변수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미래의 개인과 사회변화에 기대수준을 통제할 때,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한 인적자본 변수(교육수준, 신체기능, 인지기능, 건강수준, 우울증), 사회자본 변수(혼인상태, 자녀의 지원, 미래간병인, 친구와의 만남빈도), 경제적 변수(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유형, 주택소유),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지역)의 상대적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II] 연구문제 I의 분석결과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특성에 따라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연구문제 I의 분석결과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특성에 따라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어떠한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IV] 연구문제 I의 분석결과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특성에 따라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V] 연구문제 I의 분석결과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표 1>에서 정의하였다. 우선 종속변수는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중요한 돌봄주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정책 인식 및 수요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국가가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때,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국가의 책임에 대한 당위성을 나타낸 개념이라기보다는 응답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인적자본 변수, 사회자본 변수, 경제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통제변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인적자

본 변수는 교육수준, 신체기능 수준, 인지기능 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증 등 4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은 문자해독 불가, 문자해독 가능 및 초등학교 졸업(기준), 중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졸 이상 등 문자해독 및 졸업한 학교를 기준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신체기능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점수의 합계로 측정하였고), 인지기능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응답자의 치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포함시킨 인지력 측정 영역(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및 계산, 소지품의 용도, 따라서 말하기, 명령수행)의 점수 합계를 사용하였다. 건강수준은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수준을 측정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우울증은 CES-D10 척도²⁾에 따른 우울증 여부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자본 변수는 우선 비공식적 연계망과 공식적 연계망으로 영역을 분류하였다. 비공식적 연계망은 혼인상태, 자녀의 지원, 친구와의 만남빈도, 미래 간병인 존재 등 4개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공식적 연계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각각 측정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의 측정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여러 연구(OECD, 2001; Harper, 2001)가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공식적 연계망은 유석춘(2004)의 분류를 참조하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연고

1) ADL 지수는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가지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IADL 지수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 걸고 받기, 약챙겨먹기 등 10가지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2) CES-D10 척도에 포함된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에 대한 10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는가? ②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는가? ③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는가?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는가? ⑤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가? ⑥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꼈는가? ⑦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⑧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하는가? ⑨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는가? ⑩ 도무지 무얼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가?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일반적 특성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종속변수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국가가 노후생활을 보장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 (최소 0 ~ 최대 100)		27.74(23.76)
독립변수			
인적자본 변수			
교육수준			
문자해독불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문제해독이 불가능	3,247(6.8)	
문자해독가능 및 초졸(기준)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문자해독이 가능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	1,352(38.4)	
중고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4,427(43.6)	
전문대출 이상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1,139(11.2)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지수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지수의 합		.74(74.2)
인지기능	인지기능 점수의 합계		24.34(6.13)
건강수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5점 척도)		3.04(1.00)
우울증	CES-D10 척도에 따른 우울증 여부 (1=예; 0=아니오)	3,247(32.0)	
사회자본 변수			
비공식적 연계망			
혼인상태	혼인상태의 동거하는 배우자 있음 (1=예; 0=아니오)	7,926(77.9)	
자녀의 지원	자녀에 의해 현물·선물(여행, 생활용품 등) 형태의 지원을 제공받음(1=예; 0=아니오)	5,202(51.2)	
미래 간병인 존재	향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 이외의 간병인을 구할 수 있음(1=예; 0=아니오)	2,776(27.3)	
친구와의 만남빈도	연간 친하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120.90(115.71)
공식적 연계망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 참여(1=예; 0=아니오)	2,024(19.9)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등 자발적 특성을 지닌 모임에 참여(1=예; 0=아니오)	6,822(67.1)	
사회단체 참여	시민단체, 정당, 자원봉사 등 공식적인 사회단체활동에 참여(1=예; 0=아니오)	335(3.3)	
경제적 변수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실업급여, 산재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훈연금급여, 사회복지수당급여) 가운데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급여 유형의 수		.18(.42)

〈표 1〉 계속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경제활동유형			
일하지 않음(기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6,297(62.0)	
무급가족노동	급여 없이 가족 및 친지의 사업에 종사	318(3.1)	
자영업	자영업에 종사	1,688(16.6)	
임금노동	급여노동에 종사	1,862(18.3)	
주택소유	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1=예; 0=아니오)	7,761(76.4)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남성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1=예; 0=아니오)	4,434(43.6)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61.66(11.12)
지역			
읍면(기준)	읍면지역에 거주	2,308(22.7)	
중소도시	시도지역에 거주	3,310(32.6)	
대도시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	4,547(44.7)	
통제변수			
개인 및 가족생활 전망			
생활수준 저하 가능성	향후 자신의 생활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최소 0 ~ 최대 100)		45.24(25.70)
자녀세대의 지위 향상 가능성	향후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최소 0 ~ 최대 100)		61.49(22.77)
사회 변화 전망			
남북통일 가능성	향후 10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최소 0 ~ 최대 100)		29.04(23.13)
경기불황 경험 가능성	향후 10년 이내에 경기불황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최소 0 ~ 최대 100)		47.08(22.25)
부동산 안정성 전망	향후 10년 이내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최소 0 ~ 최대 100)		41.23(20.90)
N		10,165(100.0)	

에 의한 모임 참여, 사회단체 참여 등 3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셋째, 경제적 변수는 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 유형, 주택소유 등 3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사회보장소득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훈연금급여, 사회복지수당급여 등 5가지 유형의 공적부조 가운데 응답자가 수령하고 있는 유형의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으며,

경제활동유형은 일하지 않는 집단(기준), 무급가족노동, 자영업, 임금노동 등 4집단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주택소유는 자가주택의 소유 여부를 측정하였다.

넷째, 사회인구학적변수로는 성별, 연령, 지역 등 3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지역 변수는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다섯째, 통제변수에는 응답자 개인생활 및 사회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5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개인 및 가족생활에 관련된 전망에는 생활수준 저하 가능성,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 변화에 관련된 전망에는 응답자가 전망하는 향후 10년 이내의 남북통일, 경기불황 경험,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가능성을 측정한 변수가 각각 포함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16.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인 국가의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조사대상자의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평균 27.7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43.6%로 여성보다 약간 적었으며, 평균연령은 만 61.7세였다.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대도시 거주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각각 32.6%, 22.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자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가장 높은 43.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자해독이 가능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38.4%), 2

년제 대학 졸업 이상(11.2%), 문자해독이 불가능한 무학(6.8%) 순이었다. ADL 지수와 IADL 지수의 합계로 측정한 신체기능은 평균 0.74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에서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제약활동이 1개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지기능은 평균 24.34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은 대략 보통수준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평균 3.04), 전체 응답자의 32.0%가 CES-D10 척도에 의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자본 특성을 살펴보면, 혼인상태의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7.9%로 나타났으며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동거하는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인 경우는 22.1%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51.2%)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외의 미래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3%였으며, 친구와의 만남빈도는 연간 120.9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대략 사흘에 한번 정도 친한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연계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고에 의한 모임에는 19.9%의 응답자가 참여하였고, 자원에 의한 모임에는 67.1%의 응답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다 공식적 속성을 지니는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수준은 3.3%로 저조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수령하는 사회보장소득의 수는 평균 0.18가지로 1개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62.0%를 차지하였으며, 임금노동(18.3%), 자영업(16.6%), 무급가족노동(3.1%) 순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은 76.4%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 주택 소유비율인 55.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05).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 및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의 전망수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생활에 관련된 특성을 보면, 자신의 생활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24점이었으며,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은 약간 높은 수준인 61.49점이었다. 향후 10년 이내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 남북통일 가능성은 29.04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경기불황을 경험할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전망은 각각 48.08점, 41.23점으로 나타났다.

2.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고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10이하의 수준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델 I의 중다회귀분석에는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10,165명의 자료가 포함되었으며, 수정결정계수(Adjusted R²)는 .173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는 교육수준과 건강수준, 신체기능으로 나타났다. 문자해독이 불가능한 무학집단은 기준집단인 문자해독 가능한 무학 및 초졸 집단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일상활동 및 도구적 일상활동에 제약이 많을수록 국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지

할수록 국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 가운데 인지기능과 우울증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한 사회자본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래의 간병인 존재를 제외한 모든 비공식적 연계망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집단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녀의 지원을 받는 집단은 자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잣을수록 국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공식적 연계망 변수 가운데에서는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변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자발적 특성을 가진 모임에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유형, 주택소유 등을 포함한 경제적 변수는 모두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소득의 급여혜택을 경험할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은 기준집단인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 가족종사 집단과 임금노동 집단은 기준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택을 소유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 및 지역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도시 거주는 읍면거주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있어 성차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결정요인 분석 및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효과

변수	모델 I		모델 II-1		모델 II-2	
	전체		신체기능 제약 있음		신체기능 제약 없음	
	B	S.E	B	S.E	B	S.E
인적자본 변수						
교육수준 (기준: 문자해독가능 및 초졸)						
문자해독불가	-1.934 *	.975	.949	1.553	-1.587	1.228
중고등학교 졸업	1.064	.567	1.581	1.457	.956	.616
전문대졸 이상	1.442	.860	-.210	2.303	1.509	.927
신체기능	-.305 **	.099				
인지기능	0.61	.048	-.030	.078	.115 *	.057
건강수준	1.154 ***	.269	1.267 *	.633	1.199 ***	.295
우울증	-.388	.524	.908	1.231	-.739	.575
사회자본 변수						
혼인상태	-2.162 ***	.605	-1.533	1.380	-2.415 ***	.671
자녀의 지원	-1.546 ***	.514	-1.122	1.214	-1.693 **	.568
미래 간병인 존재	.893	.500	-.893	1.280	1.183 *	.542
친구와의 만남빈도	-.016 ***	.002	-.012 *	.005	-.017 ***	.002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279	.604	.696	1.966	-.405	.638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1.007 *	.496	-.192	1.179	1.273 *	.546
사회단체 참여	-1.251	1.231	-4.653	4.553	-.989	1.286
경제적 변수						
사회보장소득	1.523 **	.584	1.622	1.060	1.691 *	.689
경제활동유형 (기준: 일하지 않음)						
무급가족노동	-.619	1.281	-5.660	3.574	.247	1.372
자영업	-1.435 *	.672	-5.491 *	2.148	-.940	.713
임금노동	-.076	.662	-.495	2.086	.286	.703
주택소유	1.342 *	.534	-.106	1.239	1.625 **	.589
사회인구학적 변수						
남성	.869	.532	1.960	1.380	.624	.583
연령	-.062 *	.031	-.176 **	.064	-.017	.035
지역(기준: 읍면)						
대도시	-2.074 **	.602	-.942	1.356	-2.625 ***	.667
중소도시	.980	.624	.354	1.499	.627	.687
통제변수						
생활수준 저하 가능성	.069 ***	.009	.019	.021	.077 ***	.010
자녀세대의 지위 향상 가능성	.002	.010	-.012	.024	.007	.011
남북통일 가능성	.324 ***	.010	.266 ***	.025	.335 ***	.011
경기불황 경험 가능성	-.016	.010	.088 **	.027	-.030 **	.011
부동산 안정성 전망	.116 ***	.011	.091 **	.029	.117 ***	.012
상수	12.548 ***	2.870	19.259 **	5.971	8.539 **	3.246
Adjusted R ²		.173		.148		.173
F		76.739***		10.582***		68.066***
N		10,165		1,486		8,679

*** p<0.001, ** p<0.01, * p<0.05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과 남북통일과 부동산 안정성에 대한 전망 수준은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할수록, 남북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할수록,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할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로는 신체기능, 사회자본 변수로는 자녀의 지원 여부, 경제적 변수로는 사회보장 소득,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이 선정되었다. 이는 각각 연구문제 Ⅱ, Ⅲ, Ⅳ, Ⅴ를 위한 분석에서 분리모델을 설정하는 기준변수로 사용되었다.

3. 인적자본의 특성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인적자본 특성 가운데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체기능의 제약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리모델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의 마지막 두 열과 같다. 즉, 일상생활 및 도구적 일상생활에 관련된 신체기능을 측정하는 ADL 지수와 IADL 지수의 합이 1 이상으로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대해 신체기능에 제약이 있는 집단($n=1,486$)과 신체기능에 제약이 없는 집단($n=8,679$)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Ⅱ-1의 수정결정계수는 .148, 모델 Ⅱ-2의 수정결정계수는 .173으로 나타나 각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력 수

준을 비교하면 모델 Ⅱ-2가 모델 Ⅱ-1보다 높았다.

우선 신체기능의 제약 수준에 차이가 있는 2개의 분리 하위모델에서 통제변수를 제외하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해 건강수준과 친구와의 만남 빈도 등 2개 변수만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분리모델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살펴보면, 신체기능에 제약이 있는 모델 Ⅱ-1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신체기능에 제약이 없는 모델 Ⅱ-2의 경우 모델 Ⅱ-1과 달리, 혼인상태, 자녀의 지원여부, 미래 간병인 존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사회보장소득, 주택소유, 지역 등의 변수가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자본의 특성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사회자본의 특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자녀의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하위 분리모델을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녀의 지원이 있는 집단($n=5,202$)인 모델 Ⅲ-1의 수정결정계수는 .182, 자녀의 지원이 없는 집단($n=4,963$)인 모델 Ⅲ-2의 수정결정계수는 .168로 나타나 모델 Ⅲ-1의 설명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녀의 지원이 있는 집단과 자녀의 지원이 없는 집단의 각 분리모델의 회귀계수 가운데 통제변수를 제외하면, 건강수준과 친구와의 만남빈도 등 2개 변수만이 공통적으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표 3〉 사회자본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결정요인

변수	모델 III-1		모델 III-2		모델 IV-1		모델 IV-2	
	자녀의 지원 있음		자녀의 지원 없음		사회보장소득 있음		사회보장소득 없음	
	B	S.E.	B	S.E.	B	S.E.	B	S.E.
인적자본 변수								
교육수준 (기준: 문자해독가능 및 초졸)								
문자해독불가	-.389	1.136	-5.228 **	1.849	-1.706	1.701	-1.924	1.230
중고등학교 졸업	.702	.740	1.179	.891	-.351	1.535	1.312 *	.612
전문대졸 이상	2.156	1.366	1.333	1.189	-.582	2.688	1.876 *	.911
신체기능	-.235	.122	-.296	.167	-.279	.186	-.291 *	.121
인지기능	.052	.063	.038	.075	.025	.115	.066	.053
건강수준	1.265 ***	.356	1.219 **	.408	.639	.662	1.303 ***	.295
우울증	-.932	.677	.383	.819	.581	1.221	-.753	.580
사회자본 변수								
혼인상태	-3.402 ***	.792	-.447	.951	-3.223 *	1.348	-1.832 **	.685
자녀의 지원					-3.652 ***	1.363	-1.132 *	.557
미래 간병인 존재	1.024	.625	.346	.823	1.229	1.211	.752	.549
친구와의 만남빈도	-.014 ***	.003	-.019 ***	.003	-.015 **	.005	-.016 ***	.002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689	.909	-.950	.814	5.082 *	2.064	-.827	.628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1.764 **	.676	.234	.732	2.087	1.211	.651	.545
사회단체 참여	-.964	1.848	-1.385	1.656	-.204	4.858	-1.206	1.262
경제적 변수								
사회보장소득	1.054	.696	3.201 **	1.065				
경제활동유형 (기준: 일하지 않음)								
무급가족노동	1.915	1.662	-3.870	2.008	-.504	3.717	-.383	1.358
자영업	-.497	.984	-1.863 *	.936	-2.101	2.106	-1.051	.712
임금노동	-.056	1.055	.014	.879	-1.917	2.662	.434	.688
주택소유	1.565 *	.765	1.153	.752	-.433	1.280	1.814 **	.590
사회인구학적 변수								
남성	1.799 **	.752	-.006	.761	2.144	1.427	.442	.577
연령	-.124 **	.043	-.018	.044	-.178 *	.081	-.031	.033
지역(기준: 읍면)								
대도시	-1.439	.776	-3.148 **	.972	-.544	1.487	-2.354 ***	.659
중소도시	2.591 **	.802	-1.047	1.016	4.717 **	1.575	.319	.680
통제변수								
생활수준 저하 가능성	.067 ***	.012	.067 ***	.012	.003	.021	.086 ***	.010
자녀세대의 지위 향상 가능성	-.017	.014	.029 **	.015	.048	.026	-.005	.011
남북통일 가능성	.320 ***	.014	.330 ***	.014	.255 ***	.025	.338 ***	.011
경기불황 경험 가능성	.020	.014	-.052 ***	.014	.052	.027	-.028 *	.011
부동산 안정성 전망	.104 ***	.016	.123 ***	.015	.102 ***	.029	.118 ***	.012
상수	13.928 **	4.090	11.514 **	4.292	23.380 **	7.340	9.731 **	3.179
Adjusted R ²		.182		.168		.116		.188
F		43.724***		38.146***		9.525***		73.116***
N		5,202		4,963		1,755		8,410

*** p<0.001, ** p<0.01, * p<0.05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친구와의 만남빈도가 낮을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지원 특성에 따라 국가의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녀의 지원이 있는 모델 III-1에서는 자원에 의한 모임참여, 주택소유,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자녀의 지원이 없는 모델 III-2에서는 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참여유형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변수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읍면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의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읍면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의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5. 경제적 특성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 분리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사회보장 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 가지 이상의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가 있는 집단(모델 IV-1)과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가 없는 집단(모델 IV-2)으로 구분하여 사회보장소득의 수혜 특성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의 마지막 두 열과 같다. 사회보장 소득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n= 1,755$)을 대상으로 한 모델 IV-1의 수정결정계수는 .116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사회보장소득 수혜경험이 없는 집단($n=8,410$)을 대상으로 한 모델 IV-2의 수정결정계수는 .188로 나타났다.

모델 IV-1과 모델 IV-2 모두 공통적으로 혼

인상태, 자녀의 지원여부, 친구와의 만남빈도가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동거하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자녀의 지원이 있는 집단이 자녀의 지원이 없는 집단에 비해, 친구와의 만남빈도가 높을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사회보장소득 수혜경험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소득 수혜가 있는 모델 IV-1에서는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연령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장소득 수혜가 없는 모델 IV-1에서는 교육수준, 신체기능, 건강수준, 주택소유가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변수의 경우 사회보장소득 수혜가 있는 모델 IV-1에서는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중소도시와 읍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장소득 수혜가 없는 모델 IV-2에서는 읍면과 대도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변수인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하위분리모델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조사는 4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년기 이후의 연령단계별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45-54세 집단($n=3,286$), 55-64세 집단($n=2,765$), 65-74세 집단($n=2,658$), 75세 이상 집단($n=1,456$) 등 4개의 분리 하위 모델인 모델 V-1, 모델 V-2, 모델 V-3, 모델

V-4를 각각 설정하였다. 가장 연령층이 낮은 모델 V-1의 수정결정계수는 .184, 모델 V-2의 수정결정계수는 .180, 모델 V-3의 수정결정계수는 .148, 모델 V-4의 수정결정계수는 .171로 나타났다.

연령 구분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을 보면 통제변수 이외에는 친구와의 만남빈도만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45-54세 집단(모델 V-1)에서는 중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기준집단인 문자해독가능 및 초졸 집단에 비해, 건강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보장소득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이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집단(모델 V-2)에서는 신체기능의 제약이 많을수록, 자녀의 지원이 받지 않는 집단이 자녀의 지원을 받는 집단에 비해, 사회보장소득 수혜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5-74세 집단(모델 V-3)의 경우 문자해독이 불가능한 집단에 비해 문자해독가능 및 초졸 집단이, 건강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동거하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하지 않는 집단이 자영업이나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에 비해, 읍면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집단(모델 V-4)은 건강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자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자녀의 지원을 받는 집단에 비해, 가족 이외의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유

의하게 높았다. 한편, 인지기능, 우울증,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사회단체 참여, 성별은 연령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령별 비교를 통해 국가에 의한 기대수준의 차이를 정리하여 보면, 우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두 집단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45-54세 집단에서는 중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인적자본이 초등학교 졸업 수준에 비해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65-74세 집단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수준이 무학 수준의 인적자본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 가운데 혼인상태는 65세 전후의 두 연령층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의 지원은 노년기 진입 직전인 55-64세 집단과 고령기인 75세 이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래 간병인의 존재는 가장 고령층인 75세 이상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유형은 노년기에 진입하지 않은 45-54세 집단과 노년기 이후인 65-74세 집단에서는 각각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처음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55-64세 집단과 75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사회보장소득과 주택소유 등 경제적 변수는 65세 미만의 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두 집단 가운데,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45-54세 집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7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지역은 65세 전후의 두 연령층 집단에서만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수였으며,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해 55-64세 집단에서는 읍면에

〈표 4〉 연령에 따른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결정요인

변수	모델 V-1		모델 V-2		모델 V-3		모델 V-4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B	S.E.	B	S.E.	B	S.E.	B	S.E.
인적자본 변수								
교육수준 (기준: 문자해독가능 및 초졸)								
문자해독불가	11.310	6.306	-1.962	2.611	-3.417 *	1.571	.056	1.509
중고등학교 졸업	3.042 *	1.193	1.163	.962	-.957	1.065	1.639	1.825
대출 이상	2.676	1.530	2.880	1.656	.785	1.809	2.271	3.084
신체기능	-.087	.358	-.540 *	.264	.062	.189	-.265	.155
인지기능	-.042	.104	.014	.097	.101	.091	.060	.101
건강수준	1.463 **	.525	.618	.494	1.505 **	.506	2.245 **	.724
우울증	.945	1.051	-1.617	1.018	-.719	.936	-.200	1.241
사회자본 변수								
혼인상태	-.983	1.377	-3.902 **	1.240	-2.482 *	1.051	-2.382	1.508
자녀의 지원	-.496	1.142	-1.963 *	.886	-1.210	1.021	-4.234 **	1.333
미래 간병인 존재	-.233	.941	.670	.944	1.185	.936	3.458 **	1.282
친구와의 만남빈도	-.015 ***	.004	-.017 ***	.004	-.018 ***	.004	-.011 *	.005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965	.901	.254	1.118	.354	1.387	2.859	2.812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607	.952	-.254	.963	1.490	.916	.908	1.241
사회단체 참여	-2.126	1.762	.152	2.185	1.622	3.290	-6.474	6.221
경제적 변수								
사회보장소득	6.401 *	2.786	6.141 **	2.220	.252	.843	1.927	1.012
경제활동유형 (기준: 일하지 않음)								
무급가족노동	-2.240	2.110	1.604	2.290	.926	2.539	-4.040	5.639
자영업	1.001	1.146	-1.642	1.186	-3.612 *	1.399	1.318	2.900
임금노동	2.779 **	1.028	-.327	1.160	-3.804 *	1.735	-9.770	6.851
주택소유	2.358 *	.920	2.956 **	1.086	.341	1.062	-1.021	1.365
사회인구학적 변수								
남성	-1.516	.970	1.733	1.001	1.303	1.049	1.753	1.639
연령	.366 *	.144	-.033	.148	-.253	.157	-.343 *	.140
지역(기준: 읍면)								
대도시	-1.512	1.202	-1.769	1.139	-4.568 ***	1.124	.250	1.471
중소도시	1.004	1.224	2.389 *	1.182	.359	1.179	-.448	1.541
통제변수								
생활수준 저하 가능성	.093 ***	.016	.061 ***	.017	.054 **	.017	.059 **	.023
자녀세대의 지위 향상 가능성	.013	.018	.028	.019	-.007	.019	-.032	.026
남북통일 가능성	.339 ***	.017	.332 ***	.019	.300 ***	.020	.322 ***	.027
경기불황 경험 가능성	-.072 ***	.017	.008	.019	.032	.021	.063 *	.030
부동산 안정성 전망	.129 ***	.017	.020 ***	.019	.078 **	.023	.073 *	.032
상수	-11.127	8.304	11.422	9.747	28.128 *	11.555	33.555 **	11.999
Adjusted R ²		.184		.180		.148		.171
F		27.410***		22.669***		17.422***		11.703***
N		3,286		2,765		2,658		1,456

*** p<0.001, ** p<0.01, * p<0.05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가 긍정적으로, 65-74세 집단에서는 읍면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최근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놓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노인부양과 돌봄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를 앞두고 있거나 노년기에 해당하는 45세 이상의 중고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자본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교육수준 및 건강과 관련된 인간 내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본, 개인이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획득하는 사회자본, 그리고 경제적 지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가 각각 포함되었으며, 미래의 개인 및 가족,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의 영향력이 통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가족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해 교육수준, 신체기능, 건강수준 등의 인적자본 변수, 혼인상태, 자녀의 지원여부, 친구와의 만남빈도, 자원에 의한 모임참여 등의 사회자본 변수, 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유형, 주택소유 등의 경제적 변수, 연

령, 지역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가족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신체기능 제약을 기준으로 구분한 분리모델을 분석한 결과, 신체기능의 제약이 있는 집단의 경우, 신체기능의 제약이 없는 집단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제활동유형과 연령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기능의 제약이 있는 집단의 경우, 신체기능의 제약이 있는 집단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인지기능, 건강수준, 혼인상태, 자녀의 지원여부, 미래간병인의 존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사회보장소득, 주택소유, 지역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셋째, 개인, 가족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자녀의 지원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분리모델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지원이 있는 집단은 자녀의 지원이 없는 집단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혼인상태,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주택소유, 성별, 연령, 지역(읍면과 중소도시 간의 차이)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한편, 자녀의 지원이 없는 집단은 자녀의 지원이 있는 집단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교육수준, 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유형, 지역(읍면과 대도시 간의 차이)이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보장소득 급여를 기준으로 구분한 분리모델을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소득 수혜집단의 경우 사회보장소득 비수혜집단에 비해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연령, 지역(읍면과 중소도시 간의 차이)이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국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의 결정요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친구와의 만남빈도가 유일하였으며, 교육 수준, 신체기능, 건강수준, 혼인상태, 자녀의 지원, 미래 간병인 존재, 사회보장소득, 경제활동유형, 주택소유, 연령, 지역 등의 변수는 연령수준에 따라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수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관련된 사회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은 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적·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속성상 개인의 자기부양에 대한 역량과 국가에 대한 기대수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전망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개별적인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역량을 노후보장에 대한 객관적 환경 및 여건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항상 일관된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적자본은 경제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역량 등의 속성으로서 길어진 노년기에 개인이 스스로의 노후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은 다른 관련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집단은 문자해독 능력이 있는 초졸 이하 수준에 비해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부양의 가능성이 낮고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기능의 제약이 많을수록 오히려 국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기능의 제약여건으로 인해 다른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음에

도 그러한 지지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실망감으로 부정적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리모델 분석결과 신체기능에 제약이 없어 자기부양의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 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등 여러 영역의 변수들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을 설명하고 있으나, 신체기능에 제약이 있는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의한 설명이 가능한 변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때, 신체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경우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이 노후의 경제적 의존성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으나(서지원, 2008) 신체적 여건상 경제활동이 수월하지 않게 수행되는 경우 국가의 노후보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향후 소득보장의 확대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연계망의 수준으로 측정된 사회자본은 그 개념적 속성상, 앞서 살펴본 인적자본의 속성에 비해 노후부양에 관한 다양한 주체의 책임 분할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비공식적 연계망에 포함된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은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책임주체가 되므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대적 책임의 관계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국가의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해 혼인상태와 자녀의 지원, 친구와의 만남빈도 등 비공식적인 연계망이 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기대수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이 비공식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기대감의 수

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친구와의 만남 변수는 모든 분리모델 분석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가족 이외에도 주위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후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소 폐쇄적인 연계망으로 작용함으로써(Portes, 1998), 국가 부양주체에 대한 기대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분리모델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비공식적 연계망이 강한 집단의 경우에는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와 같은 보다 공식적 연계망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참여목표와 수준을 가진 확대된 사회적 연계망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노후보장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개인이 수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보면 자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읍면 거주자는 중소도시 거주자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자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읍면 거주자는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도시 거주자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의 노후보장 환경의 특성이 자녀의 존재와 상호작용하여 국가의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지원이 없어 대도시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인의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공적인 지지가 미흡한 지역사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소득에 따른 분리모

델에서도 사회보장급여와 지역 변수의 효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노후생활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특성의 의미에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집단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에 대해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사적인 노후보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에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감에 대한 교육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실제로 현재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소득의 수혜를 받지 않는 다수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향후 보다 강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보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변화를 보인다기보다는 각 연령층 모델이 해당하는 은퇴전기, 은퇴기, 전기 노년기, 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적 속성과 관련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경제적 변수와 사회인구 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높은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아직 은퇴하지 않은 연령층인 45-54세 집단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55-64세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고령기에 진입한 65-74세 집단에서 교육수준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75세 이상 후기 노년기에는 교육수준이 국가의 역할기대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의 효과에 세대차가 있어 미래 노인세대의 경우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별 유형은 경제활동유형의 효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혼인상태의 효과를 보면,

연령층이 낮거나 높은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은퇴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전기 노년기까지는 배우자의 존재가 국가에 대한 기대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지원은 은퇴기와 후기 노년기에 국가에 대한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간병인의 존재는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후기 노년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현금급여 및 서비스의 급여가 후기 노년기에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본격적인 노년기를 맞이하기 이전의 중 고령기 초반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보장소득 급여는 국가의 노후보장을 기대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는데, 빈곤이나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노후보장 기대감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낮은 은퇴전기나 연령이 높은 후기 노년기에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은퇴기에는 읍면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의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높고, 전기 노년기에는 읍면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수준에 따른 지역의 노후생활 여건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및 경제적·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향후 다양한 노후보장의 주체와 그 주체별 책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가의 노후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

사의 후속 자료로서 제2차 패널조사 자료가 공표되면,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이 그간의 개인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역동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종단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로 국가가 노후생활에 대해 보장하는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양한 영역의 노후보장에 대한 보편적인 급여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정책과제 선정 등 논의가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정책적 요구 현황을 통해 재원 배분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절한 국가의 책임수준을 명시하고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노후보장에 대한 공적부문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하위 세부정책 과제 각각에도 사회적 책임수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합의된 기준이 적용되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노후부양에 관한 사회정책의 평가기준과 우리나라 고령화문제 해법의 원칙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세대간·계층간 통합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곽효문(2005). 노인의 공적부양과 공적연금 제도의 확충방안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7, 85-117.
- 2)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

- 적 접근 -노인 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1), 65-84.
- 3) 김미혜·이석미(2007). 독일과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연구 -현금급여와 가족수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1, 369-396.
- 4) 김수영·손태홍(2007). 장기요양보호소인 주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우울 예측요인. *노인복지연구* 38, 127-156
- 5)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 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209-233.
- 6) 김윤정(2006). 노인부양부담에 있어 노인부양 모델의 효과성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79-101.
- 7) 김윤정·최혜경(2000). 사회적 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1), 209-223.
- 8) 김재일(2001). 노인의 비공식 부양체계 개발 필요성에 따른 친구에 의한 부양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2), 25-36.
- 9) 김찬우(2008).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추정 관련 고찰. *사회복지정책* 34, 163-190.
- 10) 김철주, 홍성대(2007). OECD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개혁방안. *노인복지연구* 35, 231-251.
- 11) 김형수(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3.
- 12) 김혜경(2004). 요보호 노인부양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복지 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서울시 노인복지기초수요조사 자료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123-147.
- 13) 나영선·이재열·한준상·이경욱·한성안(2005).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4)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15) 박영란(2007). 돌봄 노동 여성의 욕구와 노인요양보장 정책. *사회보장연구* 23(1), 27-56.
- 16) 박영란·강순화(2008). 여성의 취업 및 취업상태 변화가 노인 돌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2, 99-121.
- 17) 박재간(1999).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과 앞으로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5, 9-28.
- 18) 박정윤·박공주·윤순덕·채혜선·한은주(2007).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노(老-老) 돌봄 개발과 활용을 위한 농촌노인의 욕구 조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3-20.
- 19) 보건복지부(2009). 노인복지 서비스 매뉴얼.
- 20) 서지원(2008).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31-55.
- 21) 송다영(2005).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143-164.
- 22) 엄태완(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355-379.
- 23) 유석춘(2004). 한국의 사회적 자본: 연고집단. 이온죽(편). *신뢰: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서울 : 집문당.
- 24) 윤순덕(2006).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자기부양행동과의 관련성: 가구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87-99.
- 25) 윤순덕·채혜선(2008). 농촌마을의 비공식적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2), 297-308.
- 26) 윤현숙·차홍봉·조양순(2000). 농촌중 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137-153.
- 27) 이미애(2008).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노인-부양제공자 쌍(dyad)의 의견차이. *노인복지연구* 40, 103-124.
- 28) 이영현·나영선·김안국·유한구·김미란·이재혁(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9) 이윤로(2004).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보호 노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53-70.
- 30) 이은희(2008). 가족탄력모델을 이용한 치매 노인 부양가족원의 적응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195-216.
- 31) 이준상·박애선(2008). 치매노인 가족보호 제공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0, 225-248.
- 32) 이준영(2007).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 -개인별 장기요양지원금(PGB) 시범사업의 배경과 결과-. *사회복지정책* 31, 35-61.
- 33) 이현지(2007). 부양책임이 부양부담과 향후 부양의지에 미치는 영향 -심신기능손상 노인의 부양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1015-1030.
- 34) 최연희·김수현(2008). 재가 노인의 우울에 따른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28(1), 345-356.
- 35) 최희경(2008). 노인 돌봄 종사자의 소진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8(1), 157-176.
- 36)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37) 통계청(2007). 사회통계조사.
- 38) 한국노동연구원(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 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40) 허라금(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1), 115-145.
- 41)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42) 홍일선(2008).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139-160.
- 43) 황정미(2007).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어머니·노동자 지위. *페미니즘 연구* 7(1), 13-54.
- 44) Becker, G. (1964). *Human capital*.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5)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Press.
- 46) Coleman, J. S. (200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In P. Dasgupta &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p. 13-39). Washington, D.C. :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47) Harper, R. (2001). *Social capital : A review of the literature*. London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48) Morgan, J. N., & Duncan, G. J. (1982). *Making your choices count : Economic principles for everyday decision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49)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 OECD.
- 50) Pijl, M. (1994). When private care goes public : An analysis of the concepts and principles concerning payment for care. In A. Evers, M. Pijl, & C. Ungerson(Eds.). *Payments for Care*. Avebury : European

- Centre Vienna.
- 51)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52)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53) Rice, A. S., & Tucker, S. M. (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11일